

# 강원도 평창군·영월군·정선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한 건의 의 서

온 군민의 뜻과 소망을 담아 건의드립니다.

이번 4·15총선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일련의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강원도 평창군민이 느끼는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음에도 국민의 뜻이 무시되는 가슴아픈 현실을 볼 때 과연, 이 나라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나라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획일적인 인구수에 따른 선거구 조정으로 과거 「중앙집권시대」로 퇴보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국민의 뜻이 철저히 무시된 「시대착오적 사고」로 지역감정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에 우리 평창군민은 영월·정선군민과 하나된 입장으로 아래와 같이 뜻을 전달합니다.

- 우리 평창·영월·정선군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동일한 생활권과 문화권을 생성·공유하면서 「희노애락」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이는 평창, 영월, 정선 3개군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며 불가피하게 선거구가 통폐합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3개군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평창군은 수십년간 「법원」, 「검찰」, 「세무」, 「소방」, 「노동」 행정을 지근거리인 영월군과 같이 공유하고 있어 평창과 영월을 분리한다면 기존의 행정체계의 엄청난 붕괴와 혼란이 가중되어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며 그 피해의

당사자는 평창·영월군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로등 일부 행정시스템이 정선과 같이 관리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정선군과 선거구를 같이한다면 현행상의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면적」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인구수」를 기준으로 강원도의 의석수를 9석에서 8석으로 줄이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력이나 인적자원이 열악한 강원도에 확대지원은 커녕 선거구 조정을 통하여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인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는 주민의 편의와 이익이 우선시되는 참된 「지방분권」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방분권」의 의미를 분명 퇴색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치적인 논리에서 불가피하게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된다면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일동은 평창·영월·정선군민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평창군·영월군·정선군 3개군의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조정」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과거 정치사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과오의 전철로 인해 또다시 선량한 국민이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4년 2월 12일

강원도 평창군의회 의원일동